

제2회 녹색소비자연대 목적과 사업연구회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양식의 정립"**

- ◆ 일시 : 12월 13일(목) 오후3시-
- ◆ 장소 : 여성개발원 여성공동회장 5층 국제회의실

녹 색 소 비 자 연 대

- 순 서 -

사회 : 김찬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15:00 도착등록
- 15:00-15:30 개회식(명상 / 취지설명 / 진행일정 / 참석자소개)
- 15:30-16:00 특강 p4
「스웨덴의 환경운동과 생태주거건축」
- 최정신(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16:00-16:40 주제강연 p18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양식-리우+10과 녹색소비」
-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 16:40-16:50 휴식
- 16:50-18:00 발제토론
발제1.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현황과 과제 p32
-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발제2. 시민생활양식변화의 전망과 녹색생활문화 p39
- 박명희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
토론:
- 김인숙(서원대 가족환경학과 교수)
- 박동연(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
- 여진구(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국장)
- 유상오(대한주택공사 도시계획부장)
-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 한승호(한화환경연구소장)
- 18:00-19:00 저녁식사
- 19:00-20:30 녹색생활문화양식정립을 위한 포럼
- 20:30-21:00 종합토의 및 폐회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 양식

리우+10과 녹색소비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지구환경문제의 일차적인 근본원인이 천연자원의 과다추출, 소모품의 과다생산, 과다소비, 그리고 과다폐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지구환경보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02년 9월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일명 리우+10이라고 불리우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릴 예정이다. (WSSD를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로 환경부가 정함)이 회의에서는 '92 리우지구정상회의(UNCED)에서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의 10년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우선과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이 회의에 대비해 녹색소비 문제를 중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구환경문제의 핵심과제를 포착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오늘의 지구사회의 난제로 남아 있는 녹색생활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모델 또는 정책대안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긴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와 NGO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상을 보면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 대열과 개도국사이의 소위 선발 개도국의 애매한 입장과 무임승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서 국제사회로부터 의무에는 소극적이면서 수혜를 기대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가 하면 NGO들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나 아직 국제사회의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문명과 문화의 향방을 바로 잡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처지였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 일각에서 WSSD에서의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예를 들면 1992년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의제21이 선진국 주도하에 서구위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 정부들의 논리와 로비력이 강한 반환경적인 집단들의 입김으로 많은 주요 사안들이 누락된 사실을 읽어내고 이들의 보완을 위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등이다.

국면전환은 물론 한나라가 또는 한 NGO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NGO,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 국내 NGO의 연대, 동북아권의 네트워크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연대

를 통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WSSD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헌신적인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작금의 국제사회현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힘의 행사, 생명경시, 물질만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성장과 경쟁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익추구가 지배하는 신제국주의가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WSSD라고 해서 크게 기대할 것은 못된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녹색소비자연대가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양식'이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 포럼에서 리우+10과 녹색소비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문제는 기초발제자의 녹색생활문화 형성이라는 차원 다른 녹색소비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성의 한계이다.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녹색소비자연대가 리우+10회의를 전후해서 추진할 녹색생활문화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시각설정에 참고가 되는 기본 문제제시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은 필자가 '92년도 리우지구정상회의 참가, 지방자치체들의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오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의 준비과정 참여, 그리고 녹색소비생활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에서 얻어진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II. 한국시민사회와 지구환경가버넌스

지구환경가버넌스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적 개념과 지구환경문제를 관리 운영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지구환경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공유자산(Global Commons)인 국제 공공재의 운영관리는 국가정부들의 대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인류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지구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Governance를 공치 또는 협치라고 하고 있음)

이것은 1992년 출범한 지구협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에서 펴낸 <우리 지구촌 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에서 주창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전세계의 28명의 석학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출범 당시의 공동위원장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 스웨덴의 앙바르 칼손 수상, 영연방의 슈리다스 람팔 사무총장이었다. 현재는 작고한 브란트 수상을 제외한 두 공동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가버넌스 개념의 특징의 하나는 지구환경문제 대처에 행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종래의 주행위자인 국가와 유엔기구에 더해 NGO, 시민사회, 다국적 기업 등의 경제 및 사회조직, 학계, 언론 그리고 지방정부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NGO의 중심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되는 데에는 선진국 주도의 1972년도의 UN 인간과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본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선진국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주행위자인 국가와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서의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방책강구를 하지 못한 데서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가버넌스가 내포하고 있는 규범성에 있다. 지구합치위원회가 설정하고 있는 가치관은 민주주의, 자유, 정의, 공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치관에 합치하는 1990년대의 규범적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행위자로 중시되고 있는 NGO들의 국제적인 활동에서 보면 이들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에 얽매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국가간의 또는 남북간의 이해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는 NG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NGO는 지금까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감시활동, 여론제기, 정책추진 독려, 청정생산 및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외적인 압력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현격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적인 인정도 확실해지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NGO의 협력을 얻기 위해 1990년 6월에 국제추진위원회(International Facilitating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NGO의 연락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UNCED에 있어서는 제4차 준비회의에서 협력관계가 결렬되어 리우에서는 NGO별도의 포럼과 지구헌장, NGO 의제21 등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1997년 6월 개최된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리우+5)에서는 NGO대표가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와 나란히 본 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가 있었다. NGO들은 현재 각 국가의 의제21의 실천성과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다.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은 유엔에서만 아니하다. 1997년도 노벨평화상이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NGO인 <지뢰금지국제캠페인-ICBL>과 그 책임자인 조디 윌리엄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의 예이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시민운동의 비영리활동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핵심을 이룰 가장 적합한 세력'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보다 앞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시민의 참여민주주의가 정치, 경제권력을 변화시킬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학자들이 시민단체를 정부, 의회, 법원, 언론에 이어 제5권부로 칭하면서 시민사회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의 시민사회는 지구환경가버넌스의 주체가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 갖추기(Empowerment)란 틀 바꾸기를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인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현존의 잘못된 구조와 체계의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민으로부터의 개혁' '민간단체가 지역을 바꾼다' '시민운동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데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잠재력 평가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작금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사회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집단은 시민사회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합당한 여건과 힘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자리잡지 못함으로 해서 비록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등의 꼬집힘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에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시민사회는 다른 나라의 NGO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형의 생활개혁, 사회개혁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5년부터의 지방자치=환경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행정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라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의 행정의지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종래의 행정대상 또는 관리대상에서 행정의 파트너로 변신하게 된 것은 시민운동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첫 과제로 추진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민과 관의 파트너십 관계가 뿌리내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존민비, 관은 시혜자 민은 수혜자라는 관념이 굳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과 관이 행정주체로서의 대등한 관계인 파트너십 구축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갈등을 겪으며 점차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갈길이 얼마나 먼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산위에 올라가 보아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파트너십 관계를 위해 여러번 산에 올라가 본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①시민의식이 투철한 시민의 수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조직 규모의 문제 ②공익활동에 필요한 재정조달의 문제 ③취약한 재정으로 전문인력 확보 부족 ④정부와 기업 등의 정보독점의 문제 ⑤갈등해소에 필요한 정교한 교섭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목적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은 ①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위기관리 등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Volunteerism의 고양 ②시민, 기업, 정부간의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 정립 ③정보 공유 확대책 마련 ④사회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⑤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⑥사회와 행정의 감시기능 강화 ⑦실천주체로서의 조직강화 ⑧운동방식의 성숙화 ⑨국내외 연대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는 시민의 세기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주체적으로 역사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하는 변혁의 시점에 놓여 있다. 사회변혁의 원동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각자가 자율적인 주권자로서 다원적인 통로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지구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III.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소비 생활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대로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충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이 주창한 <세계자연보전전략>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그 후 일명 브룬트란드 위원회라고 불리우는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펴낸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의 기초 개념이 되었으며 1992년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인류 공통의 명제로서 확인되어 명목상에 불과하지만 현재 경제, 사회, 정치적 정책 결정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유엔은 1992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나라의 해마다의 의제21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 기구에 우리나라의 국가의제21수립 이전부터 이사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1996년 10월에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가 이 위원회의 이사국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93~'95년 그리고 '99.5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2000년 9월부터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구성되었으며 서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이 기능을 부여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은 정부의 모든 개발정책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사전심의하게 하는데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개발정책과 통합적으로 집행한다는 데 있다.

세계는 지구환경 가버너스를 위해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 개최,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국제협약 체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관련 국제법 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환경은 1984년부터 해마다의 지구백서(State of the World)를 펴내고 있는 월드워치(World Watch)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구시민 모두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제3차 지구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UNEP에서도 리우회의로부터 10년간 그리고 스톡홀름부터의 30년간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 문제들은 계속 그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을 환경활동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인 녹색소비생활문화가 구현되지 못한데서 찾고 있다. 그것은 유엔의제21의 제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녹색생활양식 또는 녹색소비에 대한 기초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미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녹색소비자포럼2'에 실려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소비자 운동'이라는 필자의 글에서도 설명되어 있음)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어떻게 녹색생활양식 또는 녹색소비를 문화로서 뿌리내려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현세대인을 휘어잡고 있는 물질적인 욕구를 정신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과제이다.

새로운 가치관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기반이 되는 윤리관은 일상적인 건전한 생활결단과 실천에서만 형성된다. 녹색소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고통을 동반하며 그 진전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녹색소비생활양식이 문화로서 자리잡게 하는데에는 개개인의 생활실천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가능케하는 정부의 정책지원, 정책결의의 구조 개편, 행정의 운영관례와 생산구조, 언론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국제 경제, 사회구조 및 체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의 역할은 오늘의 상황에서는 지구시민사회 몫으로 보인다.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양식의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벌써부터 빼놓을 수 없는 국제회의의 의제였으나 성과가 없었던 터에 오는 WSSD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되어질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렇게 짐작하게 하는 데에는 영국의 UNEP가 WSSD의 준비자료로서 그 회의에서의 쟁점사항들을 묶어 펴낸 <뉴딜-A New Deal>이라

는 책자에 실린 롤리 미카엘리스의 <지속가능소비와 생산>이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옥스퍼드의 지속가능소비위원회의 조사연구 책임자로서 현재 제3차 지구정상회의에 제출할 지속가능 소비의 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의제21 제4장의 실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생산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을 도모하는 일 ② '변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그의 쟁점은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요소로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후자의 도전인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간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에 대한 질문들이 녹색소비자연대의 오늘의 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 간추려 본다.

그는 우선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결과를 예시하면서 그가 제기한 문제는 ①오늘의 생산과 소비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데서 현 시장 경제체계가 개인간의 국가간의 불평등성을 촉진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러한 미국이 앞장서온 선진국형 경제모델이 전 세계에 파급되는 현상을 우선 경계하고 있다 ②인간의 삶의 보람은 물질적인 것에서만 찾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서 사랑, 지역공동체, 영적 영역, 배움, 환희 등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TV의 상업광고를 필두로 하는 언론매체들의 파급력으로 사람들을 물질적 소비에 매몰되게 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③세계화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양식이 획일화 또는 표준화되면서 지역특성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노동과 소비'만을 반복하는 생활양식에 묶어둠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있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가치관, 사회윤리, 제도 변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가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와 토론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실천을 견인해내는 일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 이유를 유엔기구나 OECD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술혁신과 인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를 소홀히한데 원인이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자원소비와 환경영향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는 비교적 용이한데 비해 주관적이고 질량적인 사회적 또는 문화적평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래의 '변영'에 대한 인식은 주로 물질적인 충족과 관련짓기 쉽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그들의 건강, 가족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안정도 사람들이 중시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적인 소비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욕구충족을 가능케하는 변영으로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①'이만하면 됐다'라는 한계가 있는 만족감을 되살려내는 일 ②참의미의 만족감은 인간관계에서 찾는 일을 강조하는 것 ③개인의 성장, 사회발전, 또는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을 풀어내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다 해도 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형성에는 많은 다양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사회변혁의 원동력은 가정, 학교, 직장, 종교기관 등에서의 반복적인 인간관계에서 얻어진다고 한다.

사회규범은 사회의 힘있는 집단들에 의해 형성된다. 20세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정부, 다국적 기업, 금융 및 재정관련기관, 언론 등이었다. 강자들의 논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관이나 윤리관의 전환도 이들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종교기관, 지역사회 집단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은 종래의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패러다임전환의 바람을 주도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윤리관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결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앞서 지적했다.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의 행동강령이 제정이 된 지도 10년이 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지방정부들이 의제21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에도 절대 다수의 지방자치체들이 지방의제21을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방의제21이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행정의 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지방의제 21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행동지침으로서 각 지역사회의 주민, 기업, 정부의 공동작업으로 수립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물론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수단이며, 틀이고 모델이 된다고 보아 그 활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들은 이 행동지침을 수단으로 하여 각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실천주체들을 묶어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운동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여론조사 등의 시작단계의 기초적인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서 한시 빨리 탈피하여 실천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직과 활동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이든 UNEP의 지구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for the Earth)의 소집단들이건 녹색소비자 연대가 가지고 있는 실천조직이건 간에 녹색생활문화를 전인해내는 힘의 원천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녹색생활 문화창달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 등 3주체 각각의 기본 과제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영역(정부)의 과제는 ①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정책 마련(공급관리→수요관리, 사후대책→사전예방, 청정산업 및 녹색소비 촉진, 오염원은 발생원에서 대처 등) ②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지원책 마련 ③환경가버너스를 위한 행정체계 전환(분권화:중앙정부→지방정부, 광역→기초, 구·동 재정자립 등 자치능력 확보, 관 주도→민과의 협력) ④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기법활용은 정부가 솔선수범(환경마크제품 정부우선구매, 환경감사제도 우선실시 등) ⑤지방의제21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행정에 통합적으로 수용 ⑥지자체간, 국제기구와의 연대 강화 등

2) 민간영역(기업)의 과제는 ①지방의제21의 한 주체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 참여 이행 ②환경친화적인 경영, 생산, 유통, 폐기물 처리 이행 ③녹색소비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녹색구매지침 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④지속가능한 경제발전모델 개발 위한 투자 확대 ⑤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적극지원 등

3) 제3영역(시민사회)의 과제는 ①실천주체 기반조성에 지역사회 자원의 총동원(인력, 기술, 재원, 공간 등) ②실천기법 개발 및 보급 ③실천활동을 위한 거점 확보(기능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동회 활용 등) ④실천과 관련있는 기관(정부, 기업, 학계, 언론 포함)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소비를 줄이는 녹색생활 문화구축의 핵심과제는 오늘의 성장위주의, 물질위주의, 편의위주의 그리고 힘의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 반환경적인 文明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지속가능한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혁명은 종래의 기술의존적인 기술혁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나 욕망억제를 가능케하는 가치관, 윤리관 및 체제변경을 어떻게 성취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로 세계의 환경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IV. WSSD 2002와 21세기의 지구환경문제의 숙제

2002년 6월에 개최예정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세계 6억명(TV시청 연인원 600억명, 직접관람자 170만명 예상)의 인구가 열광하는 2002월드컵 경기에 밀려 9월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최를 환경부가 추진한 바 있음)

빈곤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회의는 '72 스톡홀름 인간과환경회의의 30주년, '92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 그리고 '97뉴욕 유엔환경특별총회 5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지난 10년 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의 경제, 사회질서를 환경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170여개국의 정상급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학계 및 NGO대표 등 6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의제21의 정신에 따라 9개 주요 그룹과의 협력강화가 중심적인 운영원리로 작용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 부문별 준비활동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이 회의는 4차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국가와 지역차원의 준비사항, 주요 집단의 참여방안, 저명인사 토론회의 내용을 점검하고 WSSD의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담긴 결의문 내용을 합의 도출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회의들도 개최하고 있다. 준비회의 과정에서는 사회풍조의 분석, 국가별 평가서들, 권역적인 점검사항들 시민사회와 국제기구들의 요구사항들을 참고하게 되며 1992년 이후 새로 부상한 세계화로 인한 제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된다.

유엔은 WSSD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각 나라에 국가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게 이 기능을 맡기고

그 산하에 부문별 대책반을 두고 그 운영과 추진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기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제21추진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산업계 준비위원회, NGO 또는 여성환경인의 준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청년, 노동계 등도 별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국가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19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 부분 등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보내는가 하면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준비회의에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팀을 파송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WSSD에서의 동북아 여성코카스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미 지난 9월에 우리나라에서 1차로 한,중,일 여성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국가준비위원회의 국내 대책으로는 리우+1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정책적용 확대와 획기적인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세대인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까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PCSD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고용, 생산성, 임금, 저축, 이윤, 정보, 지식과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오염, 폐기물, 빈곤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통합적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업무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금번 WSSD에 대한 세계인의 이목은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양식과 관련해서 열켜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낙관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기대는 버릴 수가 없다.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세기를 흔히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19세기의 열강들의 패권주의로 인한 공간지배의 정당성이 붕괴되면서 20세기는 국가마다 부를 추구하는 경제의 세기였다. 경제발전이 일정부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인정하나 그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전인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60년대의 농약의 해악성을 파헤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1970년대의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에서 펴낸 <성장의 한계>보고서, 1990년대의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폭로한 <도둑맞은 우리의 미래>와 오늘의 육식문화의 프리즘을 통해 현대문명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을 예고하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탈우육 문명에의 도전(Beyond Beef)>등이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온에 의한 천재현상과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페르시아만 전쟁 등의 인재들이 잇따라 발발하면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뒷전에 밀려 있던 환경문제가 현재는 국제정치 현안의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같이 하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은 안되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21세기의 지구환경문제의 숙제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지구공동체인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구환경문제만큼 '총론찬성' '각론반대'가 현격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명분상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 또는 자국이 그 대처에 적극 대응하는 일은 별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20%의 세계인구가 세계의 80%의 지구의 자연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뒤따르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자원다소비 생활양식 고집과 개도국의 선진국형 경제체제 추구 지속 그리고 후진국의 생존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대책 강구 등으로 남북간의, 국가간의 이해대립은 첨예해지기 마련이다. 오늘의 국제정치, 경제체제에 의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남북간의, 국가간의 격차는 세계 도처에서 대립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지난날의 이념갈등의 동서냉전이 빈부의 격차로 인한 남북전쟁으로 바뀌어 핵전쟁이 아닌 지구생태계의 보복으로 인류는 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서의 상호간의 일보의 양보도 없는 해결의 교착상태는 리우회의의 후 10년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우+5였던 1997년도의 유엔환경 특별총회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비롯해서 리우+10을 위한 지금까지의 준비회의에서 드러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여러 면의 견해차이에서도 정후를 감지할 수 있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방법의 차이, NGO와의 파트너십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인 재정 및 기술이전 증대를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표명에서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도출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들간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촉발제의 역할은 NGO가 담당해야만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NGO는 시장원리의 한계와 정부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데서이다. 우리나라의 NGO도 여기에 가담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그 선두에 나설 수도 있다.

WSSD가 지구환경문제의 딜레마를 풀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지구정상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이 회의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어 있다.

V. 녹색생활문화와 녹색소비의제21

의제21은 '92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주류는 '72 스톡홀름의 인간과환경회의에서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그리고 '92 리우에서의 환경과개발회의에서는 G7의 선진국과 G77의 개도국간의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구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은 '92 리우정상회의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접근방법에 지나치게 편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WSSD에서는 새로운 의제들을 재협상하기 보다는 기존 의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모색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제21의 의안 추가나 시각조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 의제21에서 누락되어 있는 의안은 물론 기본적인 문제에서 틈새를 찾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의 특수성을 살려서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필요로 하는 '준거틀'과 기준을 서울대의 김귀곤 교수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행전략과 매커니즘은 동양적 철학과 가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말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무대에서의 지금까지의 관망만하는 주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 가담할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NGO는 시도해야 한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 지구환경가버넌스와 관련해서 세계의 주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①개발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선발개발도상국(NIES-Newly Industrilifed Economics)들이 대거 이 지역에 포진하고 있어서이다. 일본(50년대), 싱가포르, 홍콩, 대만(70년대), 한국(70년대 후반), 태국, 말레이시아(80년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인도네시아(80년대말) 등이 신흥공업경제국가들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②아시아권이 세계인구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세계인구동향의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③이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현상, ④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엄청난 생산과 소비욕구 분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녹색소비와 관련된 문제로서 심각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중국의 13억(세계인구 25% 육박)인구의 소비양식의 변화에서 예상되는 대혼란이다. TV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소비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13일에서 15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일본, 한국, 여성환경인들이 WSSD준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전체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중국에는 민간단체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중국의 여성환경운동의 현황, 과제, 전망'이라는 제목

으로 주제로론 국가별 발제를 한 리아오 웨리 라는 중견여성은 <북경 지구촌 환경문화센터>라는 민간단체의 회장이었다. 그는 이 회의의 첫 토의에서 30분간의 발표를 마치고 곧 귀국길에 올라야 할만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여성환경운동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가 황급히 귀국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환경운동을 위한 풀뿌리운동가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라고 했다.

그의 발표내용의 골자는 중국이 자유경제체제를 수용함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13억 중국인의 폭발적인 소비풍조에서 빚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대로 세계인구의 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문제와 소비문제는 환경관련 국제회의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의제의 하나이다. 얼마 전까지 자원소비가 억제되었던 중국의 전 인구가 미국의 로스앤젤리스의 최저생활자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4-5개의 지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비유는 오늘의 소비행태를 걱정하는 자리에서 들어오던 것이다.

리아오 웨리의 결론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오늘의 소비추세를 멈추지 않는 한 20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개의 지구를 더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오늘의 인류는 소비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비태도에 대한 현세대인의 자성을 촉구하며 의식혁명을 주창했다. 늘 환경인들이 하는 말이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욕망의 고풍이 풀렸다는 중국에서 온 여성에게서 듣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달랐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회의에서의 쟁점은 선진국의 생활수준과 발전도상국의 인구증가 문제이다. 최근에는 선발개도국의 경제개발의 추세와 양식이 추가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자원다소비국들의 소비양식을 문제삼는가 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의 문제를 제기하며 서로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데서 환경개선의 돌파구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는 WSSD에서는 이상과 같은 양극화 현상의 갈등이 해소되므로서 진일보한 지구환경가버년스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아시아권의 선발개도국들의 정부와 특히 NGO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그 폭도 넓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지구환경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에따라 감당해야 하는 책무도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1992년도의 월드워치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소비계층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다소비층 20% 중간계층을 60% 그리고 빈곤층을 20%로 보고 있다. 20%의 다소비층은 생존을 위한 자원의 절대 필요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20%의 빈곤층보다 자원을 수 십배 또는 수 백배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원다소비층은 GNP가 7,500불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자원다소비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유감인 것은 우리나라는 지구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나라로서는 세계8위인 반면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로서는 96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WSSD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구나 단체 또는 국가별의 목적이나 특수사정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선과제선정과 대책모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국 여성인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동북아권의 선발개도국과 선진국의 당면과제는 녹색생활문화를 위한 녹색소비 양식의 모델 개발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 문제는 WSSD에서 핵심과제이기도 한데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금까지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추가하고 <녹색소비의제21>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제안한다.

이 과제 수행은 단시일에 몇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제21의 수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작업은 상당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꾸준하고도 치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동북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후 WSSD에서 실천모델로서 논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제시에 불과하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백분 활용해서 녹색생활문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VI. 맺는말

금번 WSSD의 주제는 <빈곤문제>이다. 새세기, 새천년에 인류가 희망하고 있는 평화, 평등, 화해의 세계는 오늘의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기대할 수 없는데서 이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서의 우선과제도 빈곤타파이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인간내면에 증오와 원한이 쌓이게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테러에 의한 대참사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증오와 원한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들도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세계인의 선망과 추구의 모델이었던 최강의 미국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부와 과학기술의 표상이었던 무역센터 건물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세계 인류는 문명의 위기를 우려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인류는 지구환경의 위기, 문명의 위기의 백척간두에서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금번 테러사태에 즈음해서 미국 국민의 통합은 물론 반테러를 위한 세계인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다. 국민적인 통합은 사회발전의 상승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문제는 통합으로 묶어진 힘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생활문화 구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억제를 가능케 하는 데에는 철학적인 정신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혁명이란 빅뱅(Big Bang)과 같은 대충격을 발판으로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전환의 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WSSD가 미국에서의 대참사의 충격속에서 준비되고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 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일찍이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의 밀레니엄을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21세기 백두부터 세계전쟁의 위협, 환경악화, 인간불평등, 나아가서는 문명간의 갈등의 요인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세대인의 최대의 과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라는 과제는 지금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시민생활 양식의 변화와 녹색생활 문화

박 명 희(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우리 사회의 시민생활 모습
 - 1) 라이프스타일 변화
 - 2) 소비환경과 패턴 변화
 - 3) 가사·여가·학습의 변화
3. 사회의 어떤 요인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나?
 - 1) 물질주의가치우위
 - 2)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 3)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 4) 개인주의의 강화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
 - 5) 경제구조의 변화와 직업안정의 위기
 - 6) 가족구조와 가치의 변화
4. 미래 우리가정의 생활모습
5. 녹색 생활문화로의 변화 필요성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전세계에 기근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물자가 부족해지는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기는 쉽다. 그러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움츠러들어서 단기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새로운 소비패턴, 새로운 주거형태와 공동체 형태, 새로운 생활방식들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두안 엮진 -

1. 문제의 제기

우리사회의 현재모습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고 가족가치관, 소비패턴 그리고 가계경제활동도 바뀌고 있다. 또 일과 여가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인간생활의 가장기초가 되는 가족, 가정생활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사회의 현재 가정생활의 모습들을 파악하고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지, 사회의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변화원인과 진단들 통해 미래 사회의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고 대안적 생활문화로서의 녹색생활 문화로의 변화 방향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우리사회의 시민생활 모습

1)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획일화되었던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IMF라는 경제문제에 대한 경험은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생활의 추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일인당 GNP 현재 9000 \$ 곧 10000\$이며 향후 5년내에 15000\$이 될 예정임. 개인가치관중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은 생활의 안정(91.4%)이 소속감 (67.1%)이나 자존심 (68.6%)보다 또 성취감(82.5%)보다 높다(한국 한국사람들 자료편 190,1998). 전국소비자의식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은 우리사회 구성원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라는 점이다. 요즘의 패스컴에는 역대 연봉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실리고 있다. 개인의 성취도를 돈만으로 재려는 이러한 경향은 우리사회의 금전만능주의를 한층 심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가정생활에는 50%이상이 만족하면서도 왜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20%내외만이 만족하고 있을 뿐인가라고 반문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최근 3년간 생활만족도 변화, 광고정보, 1999년 11월호, 이철우).

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헌신적

최근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와 엄마는 외국으로, 돈을 버는 아빠는 한국에 남아 홀아비 생활을 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헌신적 부모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 이상부모에

게 더욱 심각하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하는가에 대해 학교를 마칠 때까지가 30.9%, 결혼 준비까지가 41% 취직 할 때까지 23.6%이며, 평생이 4.4%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가족/가정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정생활도 희생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추세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92년 80.7% -- 98년 69.9%)

개인의 성취에 많은 가치를 둔다.

과거 학벌위주의 상위직 직업만을 선호하던 패턴에서 개인의 성취추구위주의 생활에 가치를 두는 라이프 스타일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가치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에서 점차 개인주의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규격적이고 억압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편한 것을 추구함

20세기의 역사는 소비의 역사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한 복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쿨(cool)하다'는 것과 '편리하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 * 기능이 적더라도 조작성이 편리한 제품을 사겠다는 의견은 92년 50.6%에서 98년 61.4%로 증가하였다(한국 한국사람들 49) 또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값이 비싸더라도 사보고 싶다는 혁신 수용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95년 37% -- 98년 24.2%)

환경오염을 원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것은 못 참는다. 대기가 오염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환경오염이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생활스타일을 바꾸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물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매일 머리 감기를 3일에 한번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

2) 소비환경과 패턴 변화

가계 소비패턴의 변화

도시가계의 교통, 통신비, 레저 오락비가 늘고 있다. 교통.통신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9.2%에서 1999년 3.4분기엔 17.2%로 매우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천4백만명을 넘어서고 승용차 판매가 늘면서 교통.통신비 지출이 급증하며 전체 가계비 부담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전체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승용차 사용에 따른 개인교통비 비중도 9.9%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1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함

가격에 민감 : 구매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졌다.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오늘날의 소비자는 전세계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어떤 가격에 나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나온 상품의 가격을 믿지 못하는 예민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홍정'이라는 고전적 방식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business 2.0) 쇼핑장소 선택시 중요요인중 모든제품에서 1,2, 3등안에 들어가는 요인이 가격저렴요인이었다 (한국한국 사람들 , 자료편 36-40,)? 돈은 아껴야 되지만 유행하는 상품은 모두 소유하고 싶다. 이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은 중요하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싼 가격에 사고자 한다. ? 유행하는 상품을 모두 소유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할 때는 디자인과 취향은 택하고 내구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차피 유행은 빨리 변할 테니까) 따라서 저가이면서 디자인과 색상과 같은 심미적 속성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선호한다.

사회적으로 이단해서는 안됨.

모든것이 경쟁적이고 규격적임(성취의 잣대가 획일적임)

의식주, 자녀교육, 소비생활, 여가문화가 자신들의 취향이 고려되기 보다는 유행트렌드에 좌우됨. 유행상품의 트렌드가 강함. 취향이나 취미에서의 유행상품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 지역적으로 유사한 그룹의 소비트렌드가 유사함

- 주생활의 아파트화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

평소에 좁은 공간에서 기능적이고 경제적 생활을 하는 도시아파트 거주자에게 자연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이러한 욕구는 자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학교등의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선호함 (최근 아파트 촌에서 마당이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선호되는 추세가 이를 반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실내공간의 효율성이나 실내공간의 미적 요소를 더욱추구하던 경향에서 주거의 외부환경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짐 (경관에 대한 프리미엄가격의 상승이 이를 입증함)

3) 가사·여가·학습의 변화

지나치게 오래 일하고 여가로 재창조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시간은 일과 여가에 있어 일하는 시간이 많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한 셈이다 , 또한 토요일에도 주중보다 27분 감소했을 뿐 주말에 여가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 남자 보다 여자가 더 일을 많이 하며 특히 가사노동은 전업주부, 취업주부를 불문하고 여자가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

- 우리 나라 10세 이상 국민이 평일에 취업 일을 한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2분, 토요일에는 27분 감소한 3시간 35분, 일요일에 평일에 비해 1시간 49분 감소한 2시간 13분으로 나타난다.

- 10세 이상 국민의 취업 일, 가사, 봉사활동 시간을 합한 총 일 한 시간은 평일에 평균 5시간 59분, 토요일은 22분 줄어든 5시간 37분, 일요일은 1시간 41분 감소한 4시간 18분으로 나타난다.

- 하루 평균 총 일 한 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며 평일에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평균 51분, 일요일에는 1시간 47분 더 많음. 건강 및 체력 단련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세 이상 국민 중 22.8%에 불과하며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13분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취업자가 하루 동안에 직장에 있는 시간은 평일 평균 10시간 22분(100.0%)이며 이 가운데 일 한 시간은 8시간 7분(78.4%), 일 이외의 행동을 한 시간은 2시간 15분(21.6%)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가장 빈번히 하는 가사 행동은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 순으로 나타남, 음식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분,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에는 각각 52분이 소요됨
- 하루 평균 맞벌이 주부의 75.2%(vs. 전업주부 90.8%)가 청소 및 정리를, 56.0%(전업주부 74.4%)는 의류관리를, 37.8%(vs. 전업주부 62.2%)는 물품구입을 하고 있음
- 맞벌이 남편이 전업주부 남편보다 가사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지만 가사행동시간은 차이가 없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주부취업 여부를 막론하고 남편의 가족 보살피기 참여율이 높음 2001년 통계청 자료-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문화·레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즉 근로 조건의 개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사무자동화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가전제품의 보편화로 인한 가사노동 단축 등으로 소비자들의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조만간 소득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소비자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임.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대중들이 즐길만한 문화·체육시설이 태부족하고, 특히 여가시간이 많아진 저소득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여가의 부족 (진정한 휴식은 존재하지 않음)
- * 1999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0.0시간으로 나타나 95년이래 매년 감소하던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1998년(46.1시간)에 비해 3.9시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42.7시간), 미국(41.7시간), 캐나다(38.7시간), 호주(39.0시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 나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효율성 추구에 따른 학습의 양극화

- 학습에 있어서 개인 지향적인 효율성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학습에서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 학습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개인의 학력 수준에 따른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학습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지식의 축적에서 감성과 창의성의 개발로

- 또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과거의 교육이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미래의 학습의 중요 목적은 지식을 찾는 방법과 감성과 창의성의 개발이라는 것이다.
-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해 지고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토론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각을 학습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이끌어 낸다. 사회공동체의 관심사나 이슈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유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일 예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라든지 근로소득자의 세금감면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제시의 장이 마련될 뿐 아니라 그러한 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 지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므로 그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레저, 문화 오락 영역 소비심리의 양극화와 이중성

- 미래의 레저 문화 오락에서도 중요한 화두는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킬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욕구를 조금씩 충족시키는 것 대신에 하나의 욕구라도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충족시키려는 보다 극단화된 형태의 여유를 지향하는 이중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개인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레저 문화 오락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향유하려는 욕구와 이러한 서비스중 하나라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일 지라도 기꺼이 지불하면서 소비하려는 상반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 가격의 양극화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 아니면 가격과 상관없이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상품. 눈부신 과학의 발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화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형성되어 시장자체의 규모를 늘이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또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는 크게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재화들 사이의 품질이나 성능의 차이가 크지도 않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러한 세밀한 부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재화든지 재화의 가격과 품질보다는 소비자의 제한된 시간요소가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사례) 영화의 예

시간제약과 금전제약으로부터의 탈피

- 소비자는 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검증된 재화를 구매하므로 자신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격은 비싸지만 시간의 소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가 시간제약이 가장 큰 걸림돌인 미래소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의 레저 문화 오락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소비자는 동시에 여유를 가지는 활동을 추구하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간제약으로부터 그리고 금전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 인간의 수많은 활동이 기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건강과 관련된 스포츠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직장과 교육중심형 주거에서 생활과 여가 중심형 주거로

-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도 바뀌게 될 것이다. 도시로만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이나 과거 문물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거나 다양한 젊은이의 문화가 펼쳐지는 도시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출퇴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없어지며 자유시간 근무제가 확산되기 때문에 굳이 환경이 나쁜 도시에 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의 가치는 더욱 급증할 것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거주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에 쫓긴 일상생활로부터의 자유를 누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주택은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외부는 오히려 첨단기술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집 앞의 텃밭에서 야채를 가꾸어 먹고, 꽃과 나무를 가꾸며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적당한 공간을 가진다.

개인의 취미활동과 관련된 동호회의 활성화

- 개인화의 가속화와 함께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문화행사나 주요 공동체 단위의 축제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형성된 다양한 동호회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최근 인터넷에서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끼리를 모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에는 서로간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관계(Relationship)를 형성하는데 있다.
- 다양한 국가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공동체가 있다

면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1.5%의 응답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는 답도 무려 55.6%에 이르렀다. 이러한 호응은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간의 관심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중에서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3.7%가 취미활동 분야였고, 다음으로 직업 관련 분야가 22.3%, 가족에 대한 분야가 17.7%를 차지하였다. 각종 지원은 8.2%로 사회참여의 기회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강한 공동체 성격을 나타내는 종교나 정치적인 활동은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취미와 직업상의 이유가 크게 중시되어 이러한 유형의 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위의 조사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특이할 만한 것은 인터넷을 오래 사용한 사람일수록 초보자보다 다양한 공동체 영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의미는 인터넷을 오래 이용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초기에는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이나 동영상 등에 관심을 보이거나 점차 인터넷에 익숙해지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게된다.

3. 사회의 어떤 요인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나?

1) 물질주의 가치우위

도덕적 상실, 물질주의와 기회주의

- 전국소비자의식조사에서 사회구성원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만능주의의 역기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생활만족도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큰 폭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96년을 보면 100만원 미만 층에서는 75.3%에 불과했지만 300만원 이상층에서는 82.6%로 양자간에는 7.3%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최근 3년간에 하나의 예외도 없어 우리사회의 생활만족도는 결국 돈이 결정짓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가족모델이 단일하다.
- *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의 모델이 되고 싶은 욕구
- *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의 모델은?

-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의 조건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속물시 하는 이중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
-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충족이 강하나 부자들의 소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규범도 외부적으로는 근검절약에 대한 가치를 표방하고 있고, 사회정의를 주장하나 내부적 지향점은 경제적 부의 축적에 대한 욕구가 강함. 따라서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은 자녀의 적성을 찾기보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갖기를 바랍.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강남지역의 문화 편중화를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델은
- (강남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자녀는 명문대나 유학생 부모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 남들이 소유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 가족. 가정생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성년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 주거를 달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의식을 하면서도 (67.8%), 시설만 좋다면 부모를 양로원에 모셔도 좋다고 생각한다.(29.1%) 또한 부모세대도 내가 능력만 된다면 자녀와 따로 살겠다고 생각한다. (87.5%)

2)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재산, 지식, 기술, 정보, 인력, 임금등)

뉴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지구촌 인구가 60억명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선·후진국간은 물론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빈부격차의 문제는 인종·종교 갈등으로 내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외채에 찌들린 중남미,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급전환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옛 사회주의권 등에서만 주로 거론되는 '강 건너 불' 쯤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중산층이 대거 몰락한 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 뿐만 아니라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빈부격차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新)자유주의라는 미명 아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체제에 급속히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실업자 양산이라는 '세계화의 덫'에 걸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2백대 갑부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이 세계 인구중 소득 수준이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또 지난 60년대에는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재산보다 30배 정도였으나 지금은 74배에 달하고 있다.

- 또 정보의 불균형이 부(富)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7월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정보혁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켜 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의 경우 컴퓨터의 가격이 8년간의 연봉과 맞먹지만 미국에서는 평균 한달치 봉급으로 컴퓨터를 살 수 있다. 또 영어권 인구가 전 세계인구의 10%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 모든 웹사이트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만큼 정보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 노동시장의 임금구조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1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10% 안팎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나 10인 미만 영세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2년 연속 떨어지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임금구조'의 악순환이 앞으로 지속되리라는 걱정이 앞선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 지표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자본 예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다시 저임금 구조로 이어지는 최악의 순환고리가 굳어질 수도 있다.

3)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회

-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 각종 사고, 제도적, 정책의 부실화에 대한 생존위협
- * 1998년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057명으로 인구 백만명당 1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수는 세계 평균(111명) 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위해식품, 사고사. 교통사고, 학교급식의 부실화, 교육환경의 부실화로 인한 사고등
- 비행기 사고 등 생존위험을 많이 느낌
- 생존에 대한 위험을 느낌 (의, 식, 주생활, 공공질서)
- 의,식,주생활 , 여가생활, 교통문제등 모든 일상생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며 위해식품, 위해 요소가 너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낌.
- 소득이 높은 층은 특히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함.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유언비어, 또는 자신들의 계층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강함

4) 개인주의의 강화와 공동체의식의 부족

- 공동체 의식의 부족 : 가정생활은 가족원만의 생활이 아닌 공동체의 생활의 결과도 연결이 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두레를 중심으로한 공동체 활동은 가족들의 생활에 있어서 공동체가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자리를 잡아 왔었다. 하지만 현재의 소도시, 대도시환경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은 공동체의 협동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자체도 사라져 도시가 황폐화 되고 있다
- 공동체 시설의 부족 : 근접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은 대도시,소도시, 농촌인가에 따라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에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만 근접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다. 최근에 와서 근접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역마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도서관, 수영장, 마을회관, 사회복지관등의 시설이 커지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므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보유, 소유의 비중이 높으며 사회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 .

5) 경제구조의 변화와 직업안정의 위기

- 최근에는 직업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 * 1999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업률은 6.3%로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1998년(6.8%)에 비해서는 0.5%p 낮은 수준임. 각 기업 및 학교 , 공무원들의 연봉제로의 변화과정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의 안정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음, 또한 선배 직장인의 현재모습에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유추하는바 구조조정에서 퇴직한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바람직한 미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가계경제계획과 일상생활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나 이러한 교육도 은퇴후의 생활에 대한 교육도 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퇴직자 또는 은퇴자들의 생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평생교육의 필요성 증가

6) 가족구조와 가치의 변화

가족의 소규모화 급진

- 전국의 총 가구수(기숙사처럼 집단거주는 가구개념에서 제외)는 95년 1,295만8,000가구에서 현재 1,431만8,000가구로 10.5%나 늘어나서 인구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90년 3.8명에서 95년 3.4명, 2000년에는 3.1명으로 줄었다. 이젠 '4인 가족' 아닌 '3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표준가구가 된 셈이다. 자녀는 덜 낳고, 노부모를 모시는 집안도 적어지고, 대신 이혼,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늘어난 결과이다(2000 인구센서스; 3인가족시대 열려, 한국일보 2000.12.29).

가족중시

- 개인 관심사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가족생활(58.6%)와 경제적 안정(57.4%)이지만 이중 만족스러운건 가정/가족생활(75.0%)이고 경제적 안정은 (38.3%)에 불과하며 자녀교육, 능력개발, 노후대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한국 한국사람들 자료편 192,1998)
- 20, 30대에게 관심사에 대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 건강(40.8%)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은 원만한 가정생활(27.9%), 재테크(14.5%), 사회적 지위향상(12.4%) 순이었다(20,30대 의식조사, 동아일보 1999.01.01).

가족해체 늘어난다.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변화로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현상을 들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표시하는 조이혼율은 1975년 0.5건에서 99년에는 2.5건으로 무려 5배나 늘어났다. 이는 일본(1.8건) 대만(1.8건) 프랑스(1.9건)를 능가하는 수치.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도 75년에는 100명당 5.7건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32.5건으로 늘어났다. 결국 우리나라도 3쌍이 결혼할 때마다 1쌍이 파장에 이르는 등 가족해체현상이 급속히 서구화하고 있다(가족해체, 세계일보 2001.05.17).

● 고령화 사회의 도래

-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다. 196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했지만 2000년 7월 현재 7.1%에 달하면서 유엔 기준의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22년에는 14%가 예상돼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2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평균수명도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71년에 비해 남자는 11.6년, 여자는 12년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올해는 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10명을 부양하지만 2022년에는 21명으로 2배,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이탈리아 18.2%, 일본 17.1%, 독일 16.4%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인데, 문제는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걸리는 등 선진국의 경우 보통 40년 이상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현 추세대로 갈 경우 22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령화사회의 고민, 세계일보 2000.09.14).

세대간의 가치격차

- 개성화, 자기편의주의, 타인에 대한 배려
'세대간 균열'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심한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로 우선 개성화, 자기편의주의의 심화를 들 수 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보이려는 개성화 지향은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편한대로 살아가려는 자기편의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두 흐름은 젊은 세대일수록 강해져 기성세대와는 세대간의 단절로까지 비추어질 정도이다. 또 다른 변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약화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상당히 중요시되었던 이러한 가치관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약해지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변화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몇 항목에서 10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 가족의 가부장적 권위의 실추 :

- 아버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주축이 되는 40~50대의 아버지들은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예전처럼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권위 상실은 가정에서의 영향력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의 기능 상실이라는 위기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의 남성문화는 체면문화다.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여 남 때문에 조정되어지는 문화다. 자신을 숨기고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 권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권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문화가 체면문화다. 항상 남을 의식해야 하므로 가장 소중한 이웃인 자신의 가족을 통한시하고 남들 앞에서 가족을 칭찬하기는 커녕 꺾아 내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하지만 여성은 다르다

- 경제적 힘과 생물학적인 힘, 이 두가지가 만나서 앞으로 20년간을 이브올루션의 시대로 만들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모든 소비재의 80%를 직접구입하거나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정용 가전제품의 51%와 일반의약품의 75%를 구입하며 건강문제에 관련된 의상결정의 80%에 영향을 미친다. (클릭 이브속으로, 김영신역 2001)

4. 미래 우리의 가정의 생활 모습

1) 선택의 다양성

- 소유보다는 접속이다. 소유보다는 경험이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가 미덕이었던 소비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한다.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은 궁핍의 어려움에 따른 소유욕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모두 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그 자체보다는 생활의 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추구한다. 일하는 시간, 장소, 내용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따라서 앞으로 5-10년후의 미래 상황은 이러한 선택의 다양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정형화된 패턴이 좀더 융통성 있어지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융통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유형을 예를 들어보자

- * 보보스 족 : 보보스는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보보스족은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철학을 가진 보헤미안과 자본주의세계의 기득권층인 기존 귀족들의 특징을 아우르고 있다. 브록스에 따르면 '보보'는 돈과 권력을 획득했지만 창의성과 정신세계를 숭상하며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디지털 시대의 '신엘리트'로 묘사된다. 다시 말해 사업가로서의 자기 성취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도 자유분방한 예술가적 자유분방함을 잃지 않고 있는 새로운 지배엘리트 계층이다. 보보스는 명문대 출신이면서도 결코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 언제든 돈 따위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저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세계와 생활방식은 자유로울 수 밖에 없다. 소비에 있어서는 과거의 획일화된 소비가 아니라 자기만의 격조있는 소비감각을 즐긴다.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좋아하는 물건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한다. 취미 활동을 위해 고가의 낚싯대를 장만하는 것 등이다.
- * 반면 보보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용 소비에는 인색하다. 보보스는 사고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상사는 물론 부하직원과도 격의 없이 지낸다.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섹스를 즐기나 결코 무분별하지 않다. 어느 계층, 어느 누구와의 만남에서도 어울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보스는 대부분 디지털시대의 선구자들로 정보화로 무장하고 있다.

2) 가족보다는 나의 생활, 결혼시기도 내맘대로 ,

- 전통적인 가족중심 생활이 변형되어 정형화된 가정생활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결혼적령기는 사라지고 가족생활 주기중 가정형성기가 늦어질 것이다. 또 형제만의 가족, 무자녀가족, 편부모 가족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족구조가 소규모화 되고 큰 주택보다는 소형의 기능적 주거가 일반적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된 주거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 됨에 따라 소형 원룸주거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가족보다는 개인중심위주의 생활은 자신의 건강, 신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건강관련 속성이 의, 식, 주 생활에 깊이 연결될 것이다. 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역사회에 스포츠시설 건강관련 상품, 주거의 안전과 건강관련 시설 및 관리를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생활을 더욱 중시하면서 개인의 취미, 레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증할 것이다. 가족해체현상이 일어 이혼율이 급증하는 상황이 있는 반면 가족 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양면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3) 환경 친화와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대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소박한 삶

편리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만들어낸 것들에 익숙해 지면서 우리는 점차 많은 부분들을 그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최첨단의 물건들은 더 이상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통제 가능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단순하게 사는 삶을 위한 네크워크는 단순하게 살아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한 삶은 아무생각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꾸려가는 삶,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삶을 말한다 선천적인 가난이나 강요된 금욕생활이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한 단순하게 살기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인지, 욕구에 의해서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소박함은 싸구려와 구두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소박함을 추구 하는 사람들은 쉽게 못쓰게되는 값싼 물건보다 비싸더라도 오래 쓰는 물건이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박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해 왔듯이 은둔생활이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소한 소비생활과 생태계에 대한 배려, 인간의 내적 성장이 조화되는 삶이 바로 소박한 삶인 것이다. 따라서 질 좋은 물건을 사서 대물려 쓰는 것은 이제 상류층사회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소박함의 유행은 새로운 것이 없다 따라서 가난과 부자로 나뉘어있던 세계가 소박함으로 접촉 점을 찾을 수 있다.(소박한 삶의 철학, 듀안엘진, 김승옥 옮김1999)

- 소박함이란 걸치레를 버리고 삶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 소박함이란 꼭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것이다.
- 소박함은 더 직접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가능케한다
- 소박함은 직장을 보다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
- 소박한 삶이란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4) 단순노동의 절감과 창조적 노동의 재탄생

- 가정내의 단순 가사노동은 최소화시키고 또한 동시화를 추구한다.
- 이는 육체적 노동의 단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극도로 절약한다.
- 반면에 개인의 즐거움을 가미한 창조적 노동에 시간을 할애한다.
- 조리를 하면서 빨래와 건조를 하고 또 청소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사노동 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엌의 시스템キッチン에는 식기 세척기와 청소기 그리고 다림질 공간이 한곳에 모여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가사노동중 가장 창조적 노동이 요리라면 요리는 노동이 아니고 여가 활동이 될 것이다. 가사노동의 여가화는 육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아기 기르기는 노동을 요구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원스톱화된 정보의 유통이 일반화 된다.

- 가정, 지방자치단체, 금융, 교통, 의료, 자동차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어디서든지, 어떠한 정보를 원하던지 한곳에서 해결 가능하고 주택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곳에서도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주거지의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며 모든 기기에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네트워크화 되지 않은 가전은 사라질 것이다. 가정 내PC및TV, 백색가전 등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공동체적인 조직적인 활동은 급속히 활성화되며 이러한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난다.

- 모든 사람들이 목적 지향적이며 도구적인 의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이미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의 활성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유용한 정보는 각 가정에 즉시 전달되고 주민의 의견도 동시에 전달되는 체제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지자체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마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도 하고 관심의 분야에 따라 가상공동체의 구성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NGO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공공의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웹을 운영할 때 이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5. 녹색생활문화로의 변화 필요성

- 현재의 인간을 위한 소비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보존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 기본필요를 추로 해서 지속가능성의 정도는 움직이는 저울과 같다. 한 극점에는 현세대의 인간에 대한 배려가 놓여 있고, 다른 극점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놓여 있다. 지속가능성을 통과한 발전계획들은 현세대의 욕구를 강조하는 정책과 미래세대의 욕구를 강조하는 정책 그 사이의 스펙트럼으로 배열되어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해석과 계획들이 경합하고 있는 담론의 장이다. 현재의 이 시점에서 이 담론의 장에 누가 미래세대를 대변하고 누가 기본필요를 말하고 있는가?

환경오염: 소비자 안전에 영향

- 오염된 상품의 소비에 따른 직접적 위해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해 오염된 농축산물 섭취시 신체 건강상 피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오염된 상품을 비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해당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관리비용이 제품원가에 반영되므로 환경오염이 심화 될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의 가격에서 환경관리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새로운 대안 소비로서의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친화적 소비)

- 1) 소비자체를 금욕하거나 절제한다.
- 2) 생산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실천과제는 ?
- 3) 우선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 4) 꾸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 5) 꾸준한 실천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즐겁게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 6)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가제시한 지속가능 소비를 위한 실천방안들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전략

- 1) 의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자연과 생명의 존귀함,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의 이해
생명체의 신비함과 존귀함을 이루는 태도로의 변화
- 2) 지속적 생활습관화를 통한 실천이 요구됨 ; 어린시절의 교육이 매우 중요함
강제적 부분과 자발적 부분이 함께 지속되어 실천을 유도해야함
환경친화적 소비는 즐겁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침으로 제공되고 이러한 지침이 꾸준히 지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 4) 기업, 정부의 비 환경적 관행감시 및 고발 강화
제도적 강제조치의 마련 등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필요

참가자 :

강순천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간사
 김가을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간사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실천사업부장
 김미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김병량 단국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인숙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김진희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김찬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대안교육센터장
 김태인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문숙영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박동연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박명희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박은실 녹색소비자연대 간사
 박진선 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장
 석미경 기독교청년회협의회 간사
 송인숙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심현정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여진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국장
 연제현 KSDN 연구원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간사
 오 숙 녹색소비자연대 자원봉사
 오용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
 유상오 대한주택공사 도시계획부장
 원창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이덕송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용철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이정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임은경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사무국장
 정현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
 조윤주 서울시 환경기획과 - 친환경월드컵 기획팀
 차정은 정신여자중학교 가정과 교사
 최양순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최우성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최재성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차장
 최재순 인천대 생활과학부 교수
 최정신 가톨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정옥 녹색소비자연대 자원봉사
 한승호 한화환경연구소장
 홍연금 녹색소비자연대 신용경제팀장